

“시장 즉시 안정보다 불안 완화… 실제 착공·입주에 성패”

신규택지 10만가구 공급지도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로 속도
사업절차 68개월 → 37개월로 단축
토지 보상, 교통 개선 시차 줄여야

정부가 8·13 대책에서 예고한 수도권 신규택지 10만가구의 공급지도가 완성됐다. 1차 발표 후보지에 추가된 택지까지 합하면 총 10만3900가구로 당초 계획을 웃도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에서 서울은 빠졌다. 다만 인접 지역에 주택과 일자리, 교통망을 갖춰 서울에 물린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계획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행정절차를 앞당기고 주민 반발을 조율하는 한편, 교통망도 제때 구축해야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는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후보지를 공개했다. 착공은 2030년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실제 규모는 지구 지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날 브리핑



국도교통부가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신규택지 후보지 7,67만호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후보지 중 한 곳인 경기 하남미사 K-컬처지구 모습. /뉴시스

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해당 시점까지 착공할 물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30년 첫 삽을 뜨는 데 성공한다면 2033년 첫 입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일 수단으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내놴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사업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기존 행정절차로 최소 68개월 이상 걸리

던 기간을 최단 37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신규택지가 최단기 착공모델의 실효성을 확인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봤다. 여러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토지 보상을 협의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다. 기존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졌다. 실제로 공사 시작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지

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하려면 주택 공급과 교통 개선의 시차도 줄여야 한다. 김포·하남 등은 철도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서울 접근성은 철도 연장 개통 시기와 환승 여건에 달려 있다. 주택이 먼저 들어서고 교통망이 뒤따르면 주민의 출퇴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홍 장관은 김포의 교통난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소사를 통과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경기도가 준비 중이라며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 출토로 지연된 하남교산도 문화지표조사와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발표에서 서울이 빠진 배경에 대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된 후보지부터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입법과 공론화에 시간이 필요하며 단기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서울시와 실무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내 추가 공급은 협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앞서 발표된 서울 영창동 등에서 반발이 거셌던 만큼 보상과 개발 방향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구 지정 과정에서 교통대책과 자족시설 등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의 시장 안정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당장 입주할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아닌 만큼 서울 매매·전월세 가격을 즉각 낮추기보다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를 예상했다. 또 현재의 임대차 불안에 대응하려면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임대, 비아파트 공급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랑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에 이어지는 물량에 달려 있다”며 “사업 단계별 일정과 교통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2030년까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곳 육성”

중기부·복지부, 육성방안 공개 협업형 기업 육성 모델 구축 계획 기업 성장자금 확보 뒷받침하고 AI 등 활용 개발 기간·비용 단축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을 선도할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를 키워낸다. 기술개발(R&D) 전담은행을 통해 3년간 총 600억원의 투자와 900억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하여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은 2020년 23조 2000억원에서 2024년 31조 7000억원으로 성장했으나, 바이오 벤처 창업은 2020년 581개에서 2023년 288개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신약개발에는 장기간 대규모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충남 천안시 종근당 천안공장에서 제1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 총리,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사장. /뉴시스

자금이 필요하나, 초기 바이오기업의 투자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부처별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기업 공동 발굴 → 성장전략 수립 → R&D·임상·사업화 패키지 지원 → 투자·보증 →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협업형 기업 육성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

망기업을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한다. 매년 50개사씩 선정해 2030년까지 총 200개사를 육성한다. 신약 개발 20개사, 의료기기·디지털헬스 20개사, 바이오소재·생산기술 10개사 등 3대 분야에서 중기부·복지부가 공동으로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성장디딤돌을 1대1로 연계하여 기업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1단

계2년간 기술개발(R&D)·임상·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에는 투자·글로벌 진출 등을 3년간 추가 지원한다. 기술개발(R&D) 전담은행을 통해 3년간 총 600억원의 투자와 900억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자금 확보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시험 감축 등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동물대체시험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제약사의 기술 수요와 국내 유망기업을 매칭하는 수요 기반 국제공동 기술개발(R&D)를 통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 진입까지 연계한다. 또한 중기부의 사카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IC)와 복지부의 텍사스 메디컬센터(TM

C) 등 해외 거점을 연계하여 현지 기업·병원과의 협력, 투자유치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중기부와 복지부가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선정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협업형 기업육성모델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이 될만한 새로운 기술이 국가 핵심 먹거리로 꽃피울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성과 병원·임상 인프라를 중기부의 기업 성장지원 역량과 긴밀히 연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수한 기초연구가 사장되지 않고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후보 물질 단계부터 임상·인허가·품질공정(CMC)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상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metro

엔트로픽 IPO 본격화… 서학개미 ‘우회 베팅’

이달 서학개미 순매수 7조3700억
SOXL, 아이렌, 엔비디아 수요 몰려

글로벌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엔트로픽이 상장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들이 인공지능(AI)와 반도체 테마에 선제적으로 베팅하고 있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9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재액은 53억2414만달러(7조3700억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올해 최대였던 지난 1월의 50억299만(6조7100억원)달러를 넘어선 규모다.

엔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추진으로 AI 산업 성장 기대가 부각되는 가운데,

서학개미의 자금은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관련 상품에 집중되고 있다. 순매수 1위 종목에는 반도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셰어즈(SOXL)’가 이름을 올렸다. 순매수 결재액은 35억8925만달러로, 전체 미국 주식 순매수액의 약 67%를 차지했다.

AI 데이터센터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주(10월 20일부터 26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권에는 아이렌(4347만달러)과 엔비디아(3783만달러)가 이름을 올렸다.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은 엔트로픽이 IPO절차를 밟고 있지만, 관련 상품 출시와 투자 기회 확보에 조심스러운 발

걸음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 영향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트로픽의 상장 효과는 각 ETF의 편입 여부와 시점, 실제 매입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 ETF에 투자한다고 해서 엔트로픽 공모주를 공모가에 배정받는 것도 아니며 ETF가 해당 종목을 편입하기 전에 엔트로픽의 주가가 먼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운용사는 발빠른 움직임이다.

하나자산운용은 27일 엔트로픽 등 AI 플랫폼 기업 편입을 염두에 둔 ‘1Q 미국 AI 테크 플랫폼 TOP10’을 상장했다. NH아문자산운용은 지난달 15일 상장한 ‘HANARO 미국에이전트 AI TOP2+’ ETF 광고에 오픈AI와 엔트로픽의 로고를 전면 배치하고, ‘상장 후 신속 편입 예정’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지난달 제조업 체감경기 큰 폭 개선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결과’
CBSI 104.2… 전월比 5.1p 올라

10월 제조업 체감경기가 일시적으로 작용했던 부정적 여파들이 해소되면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비제조업 심리도 반도체 투자 증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개선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04.2로 전월보다 5.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0.5p 하락했는데, 큰 폭으로 반등한 모습이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주요 지수를

합성한 지표다. 2003~2025년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삼아 이를 웃돌면 기업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제조업 CBSI는 105.6로 한 달 전보다 6.1p 급등했다. 자동차 및 기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체감경기가 개선됐다. 제조업 CBSI는 지난달 약 4달만에 100 아래로 하락했는데, 한 달여 만에 100을 넘기며 반등했다.

제품재고는 제조업 CBSI를 2.0p 끌어올렸고, 생산과 신규수주도 각각 1.1p와, 0.6p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 업황 지수는 0.2p 하락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